

(사)대한산란계협회		보 도 자 료		번창하는 산란산업 활기찬 농장 만족하는 소비자	
보도 시점 : 2025. 6. 27(금) 10:00					
담당 부서	(사)대한산란계협회 사무국	책임자	회 장 안두영(010-3723-1332)		
		담당자	전 무 김경두(010-3722-2822)		

정부, 계란 가격안정에만 급급, 생산자 피해는 나몰라라

정부는 계란가격이 상승하자 “공급도 원활한데 가격이 오른 것(금년도 생산원가 이하로 떨어졌던 2월 12일 대비 30% 상승)은 생산자의 담합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정위를 동원하여 6월 16일부터 생산자 등에 대한 전격 담합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생산자단체인 (사)대한산란계협회는 가격이 오른 것은 “사육기준 면적 확대(난각번호 4번 폐지)가 생산량을 감소시킴에 따른 수급불균형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물가 대책차관회의(6.16.)에서 “공정위를 통하여 생산자단체 담합조사, 중국산 가공계란 1만톤 무관세 수입, 사육기준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 계란 할인 행사 실시 등”을 발표했고, 농식품부는 시도 등에 시달한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의 안정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2025.4.22.)”을 통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밀식사육 확대(케이지 사육높이를 9단에서 12단으로 상향), 축사시설 설치 제한 규제 완화, 산란을 향상을 위하여 축사 소독용으로 맹독성인 청산가스(HCN) 사용” 방안 등을 내놓았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에서 눈여겨볼 점은 그 대책이 합리적인가를 차치하고라도, 모두 계란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고, 정작 사육규제 강화로 피해를 보는 생산자에 대한 대책은 눈을 찢고 봐도 없다는 것이다.

산란계 농가의 절반 가량은 연간 수익성이 마이너스(2만마리 미만 사육 농가는 △9.4%, 4만마리 미만은 △3.9%/2024년, 통계청)인 상황에서, 기준이 확대되면 단순히 계산해봐도 기존의 면적에서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매출액은 최소 33% 줄어들고, 수량이 줄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생산원가는 늘어난다. 여기에 확대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10만 마리 시설에 케이지 설치비용만 최소 20억원의 자금이 필요(출처 : 산란계협회)하다.

아울러, 15~2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받아 시설을 설치한 농가들은 융자 상환기간도 끝나기 전에 이를 철거하고 다시 융자를 받아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경기도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이전 융자금도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융자를 받아 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면, 정부가 이전 빚을 탕감해 줄거냐” 고 하면서, “정부가 현실에도 맞지않는 대책으로 윗분들에게 아부할 생각이나 하지 말고, 지원해주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가만히라도 있으라” 고 언성을 높였다.

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합법적으로 설치한 농가들 까지 나중에 개정한 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신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태” 라고 하면서, “이 소급적용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한 어떤 피해대책도 세우지 않고, 일부 극소수 농가에게만 돌아가는 정부 융자금이 마치 공돈을 지원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게나마 수익을 거두고 있는 절반의 농가마저도 사지로 모는 행태” 라고 하면서 “사육기준 확대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기준확대로 피해를 입는 농가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할 것” 을 제안했다.

참고로, 농식품부가 위탁하여 실시한 “산란계 사육면적 개정에 따른 국내 농가 대응 실태·과급효과 및 국외사례 조사” (2023.11, 농촌경제연구원) 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은 사육기준 확대시 생산자를 포함하여 소비자, 관련 산업 등의 연간 피해액이 1조 6천억원 내지 3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참고> 사육기준 확대로 인한 피해(2023, 농촌경제연구원)

분야	계	생산자	전후방 산업			가격 파급		
			소계	전방 (식품업 등)	후방 (사료업 등)	소계	중간수요	소비자출
피해금액 (억원/년)	15,794 ~37,586	2,356 ~5,633	7,298 ~17,360	2,802 ~6,664	4,496 ~10,696	6,145 ~14,593	2,912 ~6,916	3,233 ~7,677